

시론



김영집  
광주대 교수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전문위원

지방선거가 막을 내렸다. 이번 선거는 전국 투표율 61%를 기록, 지난 대비 10%라는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다. 높은 투표율은 이재명 정부 평가, 자치와 균형 발전에 대한 시민들의 정치적 참여 의지가 그 어느 때보다 뜨겁게 증대됐음을 방증한다. 반면 전남은 전국 최고, 광주는 전국 최하였다. 후보간 경쟁이 치열한 전남과 찍으나 마나 결과는 똑같다는 광주의 여론을 반영했다.

이번 선거는 무엇을 남겼고 남긴 과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첫째 '지역 생활'과 '주민 자치'의 실종이었다. 이번 선거는 정부 중간평가 성격을 띠면서, 중앙 정치가 강한 영향을 미쳤다. 14석의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중앙 정치 과열에 기름을 부었다. 지역의 고유한 민생 의제와 정책 대결은 언론과 유권자의 관심에서 완전히 소외됐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을 살리기 위해서는 지방선거를 국회의원 재보선과 제도적으로 분리하는 법 개정이 시급하다. 그 레아만 중앙정치의 예측에서 벗어나 '지역

지방선거가 남긴 과제

정치' 본연의 가치를 회복할 수 있다.

둘째, 교육감 선거의 무관심은 이번에도 반복됐다. 거대한 종합 선거의 한 축으로 병합 처리되다 보니, 유권자의 관심은 온통 자치단체장에게만 쏠렸다. 후보들은 정책을 알릴 기회가 적었고, 유권자들은 후보의 이름과 성향조차 모른 채 투표소로 향했다. 그 결과 교육감 투표의 무효표 비율이 기형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깜깜이 선거'가 재현됐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번외 없는 교육감 선거에 한해 투표용지에 후보자의 핵심 정책을 간략히 표기하는 방식, 혹은 단체장 후보와의 '리닝메이트제' 도입 혹은 자치단체장 임명제나 선거 시기 분리 등 획기적인 제도적 정비 검토가 필요하다.

셋째, 호남 정치는 여전히 특정 정당의 일당 독점 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무투표나 투표율 저하는 큰 문제다. 소수정당의 참여와 의회 진출이 가로막힌 구조 속에서는 권력의 오만과 정체를 막을 길이 없다. 올해 부분 도입한 '중대선거구제'를 전면 확대해야 한다. 사표를 최소화하고 다양한 정치 세력이 의회에 진출해 권력을 분산시킬 때 지역 정치가 건강하게 살아 숨 쉴 수 있다.

넷째, '전남·광주 통합 특별시'의 첫 선거에서 지역갈등이 노출되었다. 통합청사의 입지 문제, 거점 대학병원 유치 및 의대 신설 문제, 도시와 농촌 등 표를 얻기 위한 정치 공학이 광주와 전남 시도민 사이에 깊은 지역 갈등을 유발한 것이다. 이제 당선인들의 최우

선 과제는 선거가 남긴 이 분열의 상처를 진정한 통합의 에너지로 승화시키는 일이다. 시민주권 공론화를 통해 갈등을 조율해야 한다.

다섯째, 선거 캠프를 중심으로 전개된 '출서기 정치문화'는 지역 사회의 건강성을 위협한다. 공천권과 임명직 자리를 바라고 정계는 물론 학계, 시민사회, 지역 언론까지 특정 후보 캠프에 가담하면서 비판 세력들이 급격히 정치화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당선 이후 보은성 인사나 업무관계 관행을 최소화할 수 있는 강력한 '지방자치 인사검증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개방형 직위와 산하 기관장 임명 시 능력 중심의 인사를 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여섯째, 무엇보다 이번 선거에서는 민의를 수렴하는 진정한 의미의 '광장 정치 문화'가 실종됐다. 거대 담론과 네거티브 공방 속에서 정파 주민들의 삶에 직결된 지방의제나 민생 정책은 후순위로 밀려났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상시적인 광장정치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당선인들은 임기 시작과 동시에 정기적인 '타운홀 미팅', '주민 대토론회'를 제도화해야 한다. 시민들이 직접 정책을 제안하고 토론하는 속의 민주주의 모델을 선거 과정과 평소 행태에 도입함으로써, 투표 행위만 끝나는 선거의 한계를 보완하고 진정한 시민 주권 시대를 열어갈 수 있다.

지방선거결과와 개선방안에 대한 정치토론회가 요청된다.

社說

출범 앞둔 전남광주특별시의회 우려가 더 커지는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첫 임사회가 광주 시의회와 전남도의회 가운데 어디에서 개최될지 초미의 관심사다. 분회의를 통해 초대 의장 선출은 물론이고 행정통합에 필수적인 조례를 의결해야만 공포 절차를 거쳐 전남광주특별시가 공식 출범할 수 있어서다.

초기 운영을 위한 한시적 결정이라고 해도 상징성 때문에 그리 만만치 않다. 영암에서 열리는 의정 전체 당산자 간담회 석상에서 쉽게 결론에 도달하긴 어려울 것이라 전망 또한 우세하다. 권역별 안배, 다선 의원 중심, 정당별 배분 등을 둘러싼 의정당 구성에 동상이몽의 상황이 연출되는 모습이다. 현재 도의회가 8개, 시의회가 6개인 삼임위원회 개편 여부에 진보당과 조국혁신당, 국민의힘 등을 합해 8명인 야권의 교섭단체 기준 설정에도 난항이 예상된다.

그야말로 접합산중이 아닌가. 난제들이 산적해 있다. 이번 6·3지방선거에서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전남광주통합시장, 전남광주통합시의원을 비롯해 대다수의 기초단체장까지 휩쓸어 지방관력을 장악했다. 공천 과정에서 탈락한 유력 인사들의 무소속 출마, 호남 정치개혁을 기치로 내건 조국혁신당의 거센 도전에도 흔들림이 없었다.

인구 30만명의 초광역 통합특별시가 탄생한다. 커다란 변화를 맞이했다. 쌍두마차 격으로

특별시의회가 함께 이끌어야 하는데, 파행 우려를 더하고 있다. 불과 3주를 남겨둔 시점에서 정상 개원을 바라는 목소리가 높지만 미수료 보인다. 그동안 시·도의회의 자치법규 통합 등을 위한 관련 실무 협의를 이어왔으며 그 내용을 공개하고 의견을 듣기로 했다.

사전 조율해야 할 사안들이 많다. 개인적인 욕심으로 대사를 망쳐서도, 충분한 검토를 구실로 차일피일 미뤄서도 안 될 일이다. 당선자들 스스로가 자제 판단하는 게 이상적이다. 더 양보하고 더 타협해야 하나 지금까지 그랬듯 지역민 요구를 대변한다는 것은 좋은 구실이고, 실상은 제감투싸움으로 흐를 수 있다. 특별시민들이 볼 때는 특별시장도, 특별시의회도 민주당 소속이다. 정치와 행정 모두가 같은 당으로 일극 체제가 형성됐다. 중앙당 차원에서 막중한 책임으로 물밑 작업에 나서야 할 문제인 것이다.

역사적 전환점이다. 핵심 쟁점에 대한 교통정리를 통해 안정적으로 새출발해야 한다. 나란한 당원 근거를 마련하고 차근차근 실행해야 하는 것이다. 앞서 시의회가 분회의장 시설 확충 공사를 추진하자 도의회가 논의 없이 진행되고 있다며 즉각 중단을 촉구한 바 있다. 결국 실시설계 용역 선에서 일단락됐었다. 시간이 촉박하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는 다시는 혼란이 생기지 않도록 지혜를 모아야 한다.

스타벅스 美 본사 5·18 조롱 사태 후속 조치는 뭔가

스타벅스 미국 본사가 '뱅크데이' 사태에 걸코 일어나서는 안 될 부적절한 마케팅이었다며 "5·18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의미와 피해자들의 아픔에 대해 사과한다"고 밝혔다. 앞서 공법3단체(부상자·공로자·유족회)와 재단은 항의 서한을 보낸 바 있다. 재단은 스타벅스코리아 최대 주주인 이마트에 대한 주주권 행사를 이마트의 2대 주주인 국민연금공단에 요청하기도 했으며, 이에 공단은 "검토하겠다"는 취지의 회신을 보내왔다. 또한 왜곡·편향 기사들이 올라오는 극우 커뮤니티 일간게스트저장소(일베)에 광고를 게재한 기업과 대항사에 중단을 촉구한 결과, 모두 받아들여졌다.

명백한 조롱 행위였다. 피해 당사자와 지역사회는 물론 민주주의 가치에도 중대한 상처를 남기고 말았다. 오월의 상처와 국가폭력의 기억을 너무나 가볍게 여겼다. 5·18은 이미 역사와 법적 판단이 끝난 사안으로, 각자의 생각이 다를 수 없다. 오늘날의 대한민국을 만든 근간으로 인정

돼 헌법 전문 수록을 앞뒀다. 절대 용서받지 못할 범죄에 국민적 분노가 들끓고 있는 것이다. 신세계그룹 정용진 회장은 직접 대국민 사과에 나섰다. 광주 시민사회는 '번 깎대기'로 진정성이 없다며 규탄을 이어가고 있다. 전국에서 불매운동도 계속되는 중이다. 경찰은 정 회장을 비롯한 임직원들에 대한 고소 건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붙여 자제한 경우부터 과잉해야 한다. 고의를 가지고 기획했다는 근거를 찾지 못했다는 신세계의 자체 조사를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

기업체의 마케팅에도 역사 인식, 인권 감수성이 필요하다는 교훈을 되새기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스타벅스 본사는 오월단체가 바라는 진상 조사 등은 내부 고위층에게 보고됐다고 언급했다. 사과 수준에 머물러선 곤란하다. 책임감 있게 후속 조치를 구제해야 하겠다. 단순한 실수가 아니다. 뼈뼉이진 역사관에 어떤 관용도 허락되지 않아야 한다. 경영진의 합리적 결단이 요구되고 있다.

기고



박민혁

전남도 수도권공공기관유치지원센터 사무위원·前 전라연구원 연구전략실장

공공기관 2차 이전 전문가 릴레이 기고

2차 공공기관 이전, 에너지 전환 국가 거점으로

똥개 바꿀 것인가였다. 공공기관 이전은 건물의 주소를 바꾸는 행정 절차가 아니라 지역의 미래산업 지도를 다시 그리는 전략이어야 했다. 그런 점에서 공공기관의 나주로 이전은 1차 이전의 한계 속에서도 비교적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든 사례로 평가할 수 있다. 한전과 에너지 관련 기관들이 자리 잡으면서 빛가람혁신도시는 에너지산업의 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갖췄다. 여기에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와 관련 연구·실증 기반이 더해져 나주는 단순한 공공기관 이전 도시를 넘어 에너지산업의 실험장으로 발전할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2차 공공기관 이전은 이 기반을 어떻게 확장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탄소중립, 재생에너지 확대, 전력망 안정성, 분산에너지, 에너지저장장치, 전기화, 인공지능 기반 전력운영 등 에너지 전환 이슈는 세계 각국이 동시에 직면한 글로벌 과제다. 한국 역시 에너지 안보와 탄소중립, 산업경쟁력 확보라는 복합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 그렇다면 2차 공공기관 이전은 이러한 국가적·세계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점을 어디에 만들 것인가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현재 광주·전남은 행정통합과 특별시 전환을 앞두고 새로운 성장축을 모색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빛가람혁신도시는 광주와 전남을 잇는 공간·산업적 연결고리가 될 수 있다. 이미 한전을 중심으로 에너지 공공기관 관련 한 인프라가 집적돼 있고 광주·전남은 재생에너지, 전력망, AI, 농생명, 해양에너지 등 미래산업과 연결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고 있다. 따라서 에너지 분야 기관의 이전은 에너지 생태계에 정책·기술·평가·실증·인재 양성 기능을 결합하는 문제로 봐야 한다.

최근 정부가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 나취

주거식 배지보다 선택과 집중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된다. 2차 공공기관 이전은 지역 간 평형성 만을 앞세운 산술적 배분이 돼선 안된다. 어디에서 더 큰 국가적 시너지를 만들 수 있는지의 문제로 판단해야 한다. 특히 에너지 분야 전문 기관이라면 이미 한전 이전 이후 축적된 빛가람혁신도시의 기반을 활용하는 것이 정책 효과와 집적 효과를 동시에 높일 수 있는 합리적 대안이다.

물론 기관을 이전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는 않다. 사람이 머물 수 없는 도시는 지속가능하지 않다. 공공기관 직원과 가족, 청년 인재, 연구자, 기업인이 지역에 정착하려면 교통·교육·의료·문화 인프라가 함께 뒷받침돼야 한다. 에너지 전환으로 국가 거점을 만들겠다는 비전은 정부가 가능한 도시를 만들겠다는 투자와 함께 가야 한다.

따라서 에너지 분야 2차 공공기관 이전은 세 가지 기준에서 설계될 필요가 있다. 첫째, 이전기관의 기능이 지역의 전략산업과 실제 도 연결되는가를 봐야 한다. 둘째, 기존 혁신도시의 인프라와 정주 기반을 활용해 이전 효과를 빠르게 확산할 수 있는가를 따져야 한다. 셋째,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대학·연구기관·민간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확장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 이 기준에서 보면 에너지 기관의 나주 빛가람도시로 이전은 우선 검토할 타당성이 있다.

2차 공공기관 이전 성공을 몇 개 기관 유치로 평가해선 안된다. 중요한 것은 이전 이후 지역에 어떤 산업이 자리 잡고 어떤 인재가 머물며 어떤 기업이 함께 성장하느냐다. 1차 공공기관 이전이 물리적 이전의 시대였다면, 2차 공공기관 이전은 생태계 이전의 시대가 돼야 한다.

독자투고

가정폭력은 단순한 부부싸움이나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신체적 폭행뿐만 아니라 폭언, 협박, 경제적 통제, 반복적인 무시와 같은 정서적 학대 역시 명백한 가정폭력에 해당한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피해자들은 '참고 살아야 한다', '아이들 때문에 신고하지 못한다'라는 이유로 심각한 고통을 혼자서 감내하고 있다. 사실 가정폭력의 가장 큰 문제는 반복성과 은밀성에 있다. 한 번의 폭력은 끝나지 않고 점차 강도가 심해질 가능성이 높으며, 이를 지켜보는 아이들에게도 큰 트라우마를

'가정폭력' 사회적 관심 절실하다

남겨 준다. 결국 가정폭력은 한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회적 관심이다. 이웃의 작은 신고와 관심이 누군가의 삶을 지키는 희망이 될 수 있다. 위험한 상황이 의심된다면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하고 경찰에 신고를 하는 등 사회적 관심이 절실하다.

경찰에서는 가정폭력 발생 시 피해자 보호를 위해 긴급임시조치, 접근금지, 상담기관 연계 등 다양한 보호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피해자는 결코 혼자야 아니다. 폭력은 결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으며, 침묵은 해결이 아닌 또 다른 피해를 낳을 뿐이다.

가정의 평온은 모두가 함께 지켜야 한다.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건강한 문화가 자리매김할 때 우리 사회 역시 더욱 안전할 것이다. (이재복·고흥경찰서 읍내파출소)

를 위해 긴급임시조치, 접근금지, 상담기관 연계 등 다양한 보호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피해자는 결코 혼자야 아니다. 폭력은 결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으며, 침묵은 해결이 아닌 또 다른 피해를 낳을 뿐이다. 가정의 평온은 모두가 함께 지켜야 한다.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건강한 문화가 자리매김할 때 우리 사회 역시 더욱 안전할 것이다. (이재복·고흥경찰서 읍내파출소)

\*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하고싶은이야기·사진 등을 보내주세요  
\*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픽 뉴스: 한국·일본 1인당 쓰레기 배출량. 일 평균 생활폐기물(도시고형폐기물) 배출량, 단위: kg. 한국 1.17, 일본 0.85. 연립뉴스. 자료: 국립환경과학원

광주매일신문 1991년 11월 1일 창간 http://www.kjdaily.com. 회장 馬讚皓 사장·발행·편집인 李庚秀 논설실장 金鍾民 편집국장 朴恩成. (우)16163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로 338번길 16 대표전화 (062)650-2000 구독신청·배달안내 (062)650-2022